

총무원 · 봉은사 타협여지 안보여

총무원, 직영전환 외압은 없었다

명진 스님, 법회 통해 총무원 압박

청정승가, 대중과 소통없이 직영 지정

조계종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정치권 외압이 쟁점화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총무원 측은 "봉은사 직영전환은 당연하며, 정치권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봉은사는 "봉은사 직영전환은 정치권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단체는 봉은사 직영전환 타당성 검토보다는 정치권 외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측, 봉은사, 불교단체간 공통 교집합이 없어 불자들의 원만한 사태 해결 기대와는 달리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에 의한 종교개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 외압...진실공방 속 쟁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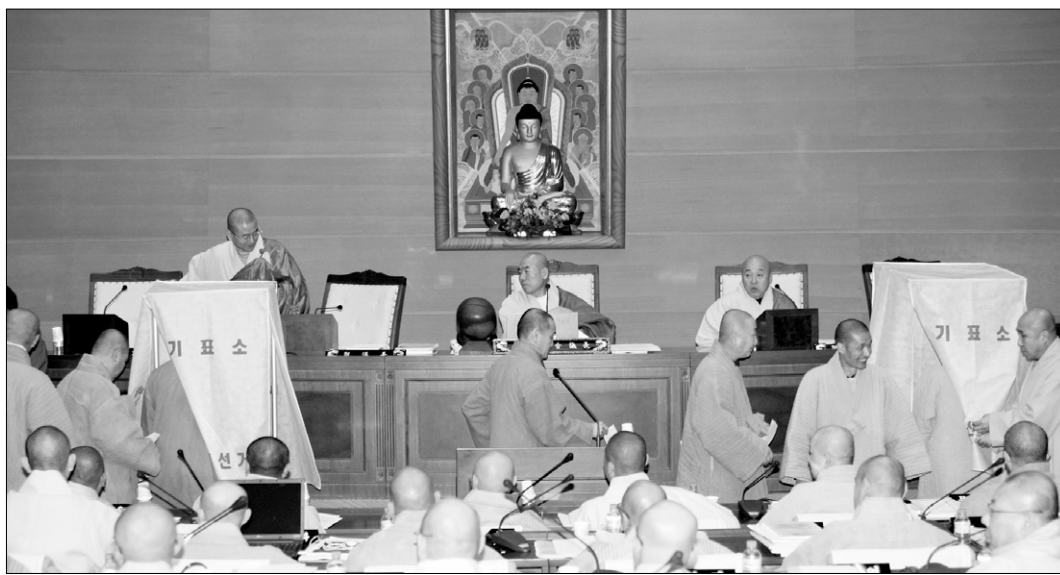
사태는 조계종 중앙총회가 3월 11일 임시총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권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49표, 반대 21표로 통과시킨 것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14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봉은사 신도들과 소통 없이 결정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은 수용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봉은사를 점령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진 스님은 21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밀통과 아합이 있다"는 외압설을 제기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2009년 11월 13일 자승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안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사찰에 죄와 스님을 주지로 그대로 나눠야 되겠다'고 총무원장스님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명진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진실공방 속에 야권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안상수 대표의 발언은 종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의 건을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 중인 중앙총회의원 스님들. 사진=박재완 기자

교탄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을 1980년 대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이은 '제2의 법난'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통한 자체 진상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명진 스님이 신도들이 전한 성금 1억 원을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대응을 자제하

는 분위기이다. 한나라당은 공식 회 의석상에서 명진 스님 발언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으며 대변인 논평도 발표하지 않았다.

불교계...종단 자주성 훼손 우려

정치권과 별도로 불교계에서는 종단 자주성이 훼손된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 발표됐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전오, 이하 대중결사는 22일 '종단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봉은사와 관련한 일체를 해명하고, 부당한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대중결사는 성명서에서 "총무원은 대중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수도 관 포교 활성화란 명목으로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했다"면서 "수도관 포교, 나아가 한국불교 증흥을 위해 노력을 세우고 임해야 할 총무원이 아직도 정치적 판단으로 이를 손쉽게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밝힌 만남의

목적 또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중결사는 "안상수 원내대표 해명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의 부적절한 만남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 불교관계 예산을 부탁받았다고 한다. 청정승가 함으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불교계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논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권력과 불교가 아합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러한 의심이 곧 종단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계에서는 정치권 외압에 무게를 실으며 봉은사 사태의 해법을 고민해 가는 모습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재가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12개 불교단체는 25일 연석회의를 열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직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의하고, 26일 한나라당에 입장서를 전달했다. 25일 광주전남 재가불자 108인도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력의 외압을 규탄했다.

직영 전환 두고 세력간 대결 그쳐야

불교단체의 정치권 외압 지적과는 다르게 총무원 집행부와 원로회의와 중앙총회는 "봉은사 직영전환은 적법·정당하다"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원은 대변인 원담 스님(기회실장)을 통해 수차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로회의 의장단은 24일 청주 보살사에서 간담회를 열

고 "봉은사 직영전환 당연하다"는 입장 발표했다. 이어 25일 중앙총회도 "외압 논란은 중앙총회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봉은사 직영 전환은 외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총회는 "(명진 스님) 외압 논란을 그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진 스님의 정제회부 의사도 내비쳤다.

이에 더해 조계종 교구분사주지협의회도 29일 부산 범어사에서 회의를 열고 봉은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측은 봉은사 명진 스님 압박이 계속되자 봉은사 신도회는 25일 직영전환 철회,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도회는 40여 년 전 총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봉은사 삼보정재가 유실됐음을 지적하는 한편, 주지 명진 스님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선 24일, 정후·수경·도법·지홍 스님 등이 명진 스님을 탄핵 시도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명진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 촉구 철회 △봉은사 사부대중 합의에 의한 주지 추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공개사죄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명진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이 철회될 때까지 매주 일요법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를 던지며 조계종 총무원 측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과 봉은사 양 측의 대립을 해소할 열쇠가 종단 자주성 수호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승가고시 '쓰고 말하기' 큰 호응

객관식 사지선다형에서 논술·면접 추가

교육원, 확대 시행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가 전부였던 승가고시에 논술·면접이 추가돼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3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19일 중앙승가대에서 처리된 4급 승가고시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주장한 교육원장 현웅 스님 체제에서 첫 실시된 것으로 고시 대상자를 비롯해 종단 안팎의 관심이 컸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4급승가고시에서 기존 객관식 문항 외에 논술과 면접을 평가항목에 넣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논술 등을 5급 승가고시 등 승가고시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논술에서는 단순 지식이 아닌 교리 핵심을 이해해 현대 사회에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면서 "기본교육기관(강원·승가대학 등)에서 4년간 꾸준히 공부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교리 이해에 사교력·창의력을 더한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논술 출제 예제는 △8경도 중 정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승 불교의 타력신앙과 개신교 등 서구신앙의 타력신앙의 차이를 말하시오 △선이 현대인에게 도을 되려면 선의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등이다. 면접도 개인적인 수행과 불교의 대화 회적 이해와 활동을 묻는 질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고시에는 287명(사미 166명, 사미니 121명)이 응시해 280명(사미 156명, 사미니 121명)이 합격했다.

조동섭 기자

"대중의견 지속 수렴하겠다"

조계종 사유재산 출연 토론회

승려사유재산의 종단출연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복지책 선결의 목소리와 다양한 경우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 시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토론회를 주최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전 토론회를 다시 열고 교구별 홍보 및 선원·강원 등을 찾아 설명회 등을 펼치기로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발제에서 "스님들이 형성한 재산을 미처 사찰

과 재적본사 등에 등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입적 등으로 일어나는 재산 상속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이라며 "출가정신을 되살리고 승려노후복지 및 승가교육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도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종 자문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법률적 검토를 밝히는 제2발제에서 "유언장 및 사인계약서는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며 "갑작스런 입적 후 승려 신분으로 간직한 삼보정재가 속가보다 불교계로 머물러 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스님들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발제문을 진지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웃종교의 사례를 주제로 발제한 김형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원불교와 천주교, 천태종과 진각종의 경우 이미 승려노후복지와 관련해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등을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선원·강원

·비구니회 대표 토론자들은 시행 취지에 공감하며 강제성과 시행시기에 이견을 제시했다.

영담 스님은 "사유재산 종단 출연 홍보를 위해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중국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금강계단 수계법회



금번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한국 육조사원)와 세계 선불교 육조사 교류연맹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17일 중국 육조사를 방문 8명이 수계 수법 제자가 되었으며, 2010년 1월 19일 26명, 3월 20일 13명 등 3회에 걸쳐 총 47명이 육조례능 대사의 법맥을 육조사 대원 방장님으로부터 수법하였으며 한국 본찰 용화사에 부처님 진신 사리 2과와 함께 육조성상을 모시고 금강계단을 설치, 삼화상 칠중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에 명실상부한 중국 선종의 법맥을 잇는 국내유일의 진무후후한 단일 계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원 방장님께서 한국 용화사 연화 방장님과 함께 한국에 혜능국제불교대학을 설립키로함의하고 오는 5월 30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육조사원과 세계 선불교 육조사 교류연맹은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정통성 있는 중국 조계 혜능 대사의 법맥을 이어 받아 혜능 대사의 돈오사상과 서민 불교 정신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저희는 때를 짚는 아픔과 자성,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깨끗하고 바른 불교로 한국 불교 평화 개혁에 앞장 설 것입니다.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실 종단, 종파를 초월한 대덕 큰스님 도반 스님, 여러분의 가르침과 동참을 바랍니다.

◎ 1차 (비구,비구니 수계 법회)

- 일 시 : 불기 2554년(2010년) 5월 25일~28일 (3박 4일)
- 장 소 : 중국 광동 육조사
- 참가요령 : 이력서 (행정) 주민등록등본 1통, 승려증, 주민증사본, 사진 4매
- 참가자격 : 비구, 비구니로 불회 회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승려로서 본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

◎ 2차 (비구, 비구니 입실 건강 및 사미, 사미니계, 보살계, 거사계)

- 일 시 : 불기 2554년(2010년) 7월 20일
- 장 소 :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
- 참가요령 :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이력서, 주민등본, 주민증사본, 사진 4매) 보살계, 거사계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증사본 1통)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불교도, 불자는 누구나

중국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금강계단

삼화상	교수아사리	보산당	법광 대화상
	설계아사리	법산당	정암 대화상
	갈마아사리	남산당	청암 대화상
전 계 화 상	덕산당	연 화	대화상
존 증 사	해 봉	대 선 사	
	청 산	대 선 사	
	법 봉	대 선 사	
	금 봉	대 선 사	

세계 선불교 육조사 교류연맹, 이사장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방장
혜능 국제 불교대학 설립 위원회 공동위원장
중국 육조사 방장

석연화
석대원

세계 선불교 육조사 교류연맹 임원명단

방 장 : 석연화		
자문위원 : 향운, 금봉, 혜산, 정진		
부 원 장 : 청산, 혜봉(김일식), 혜봉(이민택)		
사무국장 : 선 호	사서실장 : 자 은	총무원장 : 무 영
사무처장 : 자 운	호법부장 : 선 담	기회실장 : 청 운
문화원장 : 원 도	복지원장 : 혜 문	호법원장 : 일 운
수선원장 : 효 진	교육원장 : 종 섭	지도위원 : 법 봉
예술원장 : 영 사	감찰국장 : 도 관	사업국장 : 지 원
홍보국장 : 해 양	호법부장 : 선 담	감찰차장 : 오 성
홍보차장 : 혜 천	복지부장 : 자 문	문화부장 : 법 성